

국내동향 금융환경 감안한 협회의 “전자지갑” 채택

전자머니가 세계적으로 금융계와 신용카드계의 이슈로 떠오른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무총리실 소속의 금융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는 국내 은행들이 공동으로 전자머니 표준화안 제작하도록 의결했고, 금융결제원이 실무를 담당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을 비롯 시중은행이 모두 참여하여 공동작업을 벌이고 있다.

공동작업에서 최근 표준화안을 마련했다. 그 골자는 △ 전자머니의 형식은 “전자지갑”으로 하고 △ 사용 한도를 10만원 이하 소액결제로 국한하며 △ 자금 이체는 할 수 없으며 △ 발급주체를 예금은행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금이체 금지와 발급주체 제한은 전자지갑의 주요 기능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협회의 “전자지갑”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통화관리와 거래의 안전성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97년부터 시험 운용을 거쳐 '98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자지갑을 실용화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전자머니를 실용화하기 위한 국내 이전은 취약한 편이다. 우리의 금융산업이 제도적인 영향으로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전자머니 도입에 있어 필수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안 등 정보보호 부분도 발전이 뒤져 있다.

은행들이 협회의 전자지갑을 채택하는 표준화안을 만들려는 것은 이런 환경을 감안할 조치이다. 우선은 통화관리 및 금융제도에 영향이 미치지 않게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자머니의 궁극적인 발전 지향점이 네트워크(현재로서는 인터넷) 상에서의 전자결제라 한다면 우리

가 추진하는 전자지갑은 아주 소극적이며 조심스런 출발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획일적인 표준화 제정이 은행간 상품경쟁력을 지하시키고, 기술 및 시스템 개발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PC뱅킹 등 네트워크상의 결제시스템 개발을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영국에서 개발된 전자머니 MONDEX는 우리가 도입하라는 것과 같은 전자지갑형이지만 전화를 통해 자금이체까지 가능하다. MONDEX는 자국내에서는 물론 캐나다와 홍콩에서도 실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만간 일본에도 상륙한다고 한다. 이렇게 국제화하는 외국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은행들이 추진하는 전자머니는 너무 제한적이고 폐쇄적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으며, 장차 전자머니 분야에서 고립되고 뒤쳐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낳고 있다. 전자머니는 화폐로서의 역할도 역할이지만 결제수단의 편이 등 경제과급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전자머니가 새로운 정보기술인 전자상거래(EC)와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는 인식아래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를 위해서 내장성이 '97년을 완결을 목표로 작업에 들어갔다.

EC의 상거래는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하는데, 네트워크상의 전자결제는 반드시 따라줘야 하는 조건이 된다.

우리 나라에서도 CALS, EC를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새로운 물류·상거래의 수단이라는 인식하에 산업계의 도입과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은 전자머니 시작단계로서 불확실한 부분도 많지만 우리에게도 이 모든것을 포함해서 넓고 장기적인 검토와 접근이 시작되어야 할 시기라 할 수 있다. ◆